다산포럼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현대 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기반한 능력에 입 각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능력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학 연구에서는 운과 불운, 불평등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과 노력만으로 성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 라, 운이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행운이 자식의 행운으로, 부모의 불운 이 자식의 불운으로 이어지는 운과 불운의 연쇄를 보여 준다. 무엇보다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부모에 게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 히 운의 문제이다. 결국 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능 력주의와 기회의 평등, 공정 담론의 허구를 밝히기 위 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능력주의와 공정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의 하나이다. 입시나 취직 등 삶의 중요한 과정 에서 공정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그런 게 임에 뛰어들지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게임에서 룰의 공

운의 불평등과 사라진 '사회정의'

정이 무슨 소용인가. 공정이란 것은 결국 어느 정도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운을 발휘할 수 있 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정과 기회가 아니던가?

어느 사회나 법을 통한 형식적 평등이 정착되더라 도, 보이지 않는 선과 금, 차별과 실질적 불평등은 계속 존재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는 게임을 어떻게 공 정하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수준이다. 우리는 불평등의 문제와 정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에서 '정의'는 헌법 전문과 경 제 조항에 등장했었다. 제헌헌법 이래 '87년 헌법' 이 전까지 경제 조항에는 '사회정의'가 들어 있었다. 제헌 헌법의 84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 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 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 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 장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제헌헌법에 이런 급진적 조항이 들어간 것은 독일 바 이마르 헌법의 영향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양 진영의 복합적 역학관계의 반영이라고도 한다. 흔 히 87년의 헌법은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진보적 헌법이라 알려져 있지만, '사회정의'는 87년 헌법에서 부터 사라지고 다소 애매한 '경제의 민주화'로 대체되

헌법의 경제 조항에서 국민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시 장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된 것은 1963년부터였지만, 유신헌법에도 5공헌법에도 사회정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군사독재조차도 사회정의는 중시했고, 국가주 의적인 감각으로 이를 활용했다. 하지만 1987년, 80년 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사회주의의 뉘앙스를 풍 기는 단어가 유지되기 어려웠는지 '사회정의'는 헌법 에서 삭제되었다. 사회정의의 언어는 헌법에서도 공적 담론에서도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공정이 이를 대체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 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엄청나게 운이 좋은 특정 계층의 이 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하루 손발 열 심히 써 일하는 그저 그런 운을 지닌 보통 사람들은 이 에 절망해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삶의 기본적 수요인 집을 이용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은 단순히 실정법상 불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 감정이나 정의의 관념을 훼손한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헌법에서 사라진 '사회정의'를 다시 불러내어, 타고난 운의 불평등이 사회의 토대와 미래를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적 상상과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정 의의 언어는 인간과 뭇 생명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을 존중하며, 국가주의로 환원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환경 정의와 생태 정의 등 정의의 경계를 확장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 간과 자연과의 정의로운 관계로 지평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사회정의의 새로운 언어와 규범에 대한 상상력이 절실한 때이다.

社說

벌교 꼬막 집단 폐사 피해 대책 마련을

보성 벌교 특산물인 꼬막이 제철을 앞 두고 떼죽음을 당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 어지고 있다. 갯벌이 황폐화되면서 생산 량이 급감한 데 이어 양식으로 키워 오던 꼬막과 종묘마저 이상기후 등으로 집단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추석을 앞두고 제사상에 올릴 꼬막을 출하하기 위해 양식 어망을 끌어 올리던 벌교 어민들은 하나같이 망연자실 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새꼬막이 속살 없 이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벌 교 어촌계협의회는 이처럼 집단 폐사가 발생한 새꼬막 양식장이 전체의 90% 이 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성 지역 새꼬막 양식 면적은 1만 623 ha, 종묘를 생산하는 양식장도 627ha에 달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새꼬막은 연간 5000t에 이르지만 올해는 300t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어민들의 전망이다. 특 히 전국 물량의 98%를 공급하고 있는 꼬 막 종묘마저 집단으로 폐사하면서 내년

양식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폐사 신고가 잇따르자 보성군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현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을 둘러본 관계자 들 역시 양식 어망을 들췄더니 속살이 없 거나 악취를 풍기며 썩어 가는 꼬막이 대 부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어민들은 이 번 폐사의 원인으로 고수온을 지목하고 있다. 올해 남해안 일대에 고수온 현상이 지난해보다 두 배나 길게 이어졌는데 이 로 인해 물속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떼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벌교 꼬막은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풍미 덕분에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지 정될 만큼 최고로 꼽혀 왔지만 남획으로 인한 갯벌 황폐화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여기에 집단 폐사까지 반복되고 있으니 어 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수 산 당국은 정확한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꼬막 자원 회복 및 갯벌 환경을 살리기 위 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화천대유 요지경' 하루속히 진실 밝혀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탈당 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 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업체 화천 대유에서 지난 3월 퇴사하며 50억 원(세 후 28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

곽 의원은 "겨우 250만 원 월급을 받은 제 아들은 (평범한) 회사 직원일 뿐"이라 고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50억 원 수령 사실이 확인된 후 에도 "근본적 책임은 이런 사업 설계를 가 능하게 한 이재명 경기 지사(당시 성남시 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떳떳하다던 곽 의원은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의 를 소집하며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자 탈 당계를 제출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수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 이익이 소수의 민간업자들에게 돌아 가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공영개발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돌 아갈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 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전직 고위 법조 인들 다수가 화천대유의 고문과 자문역으 로 참여한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 천대유 고문을 맡았고, 김수남 전 검찰총 장, 강찬우 전 검사장,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도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였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과 분양 수익으로 챙긴 돈은 6300억 원이 넘 는다. 공공 이익 환수를 위한 공영 개발이 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론 화천대유 에 개발 수익 상당 부분을 몰아주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매일 쏟아 져 나오고 있지만 검경의 수사는 더디기 만 하다. 이제 돈과 힘을 가진 이들이 짬 짜미를 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 수사 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국민 앞에 하루 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청춘 톡톡

김윤아 동신대 간호학과 3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간을 만나고, 그 공간 에서 성장한다.

아장아장 걷기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공원이라는 공 간을 접하고, 어린이집에서 동료애를 키운다. 도서관 에서는 매너 지키는 법을, 매일 머무는 아늑한 집에서 는 편안함을, 키즈파크와 놀이공원에서는 설렘을 참고 기다리며 즐거움을 배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학교에서 공동체 훈련을 받아 성장하고, 대중교통이 나 비행기를 타고 나가 활동 반경을 점차 넓히면서 세 상과 소통하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공간을 대여 하고 구매하며 각자의 공간 속에서 저마다 성장한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지식을 쌓고 관계를 맺 으며 성장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앞으로 도 다양하고 매력 있는 공간들을 만나 성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이런 공간 속 사람들의 모습 을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놀이공원이

메타버스 시대를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나 영화관 대신 한적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외출보다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영화를 시청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간에 대한 변화가 자연 스럽게 찾아왔다.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추상 을 의미하는 '메타' (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한다.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 화한 개념으로, 우리 삶에 어쩌면 큰 변화를 불러일으 킬지 모른다. 아니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

매체와 뉴스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더욱더 다양한 공간에서 양질의 교육과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조금 늦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는 생각도 든다. 특히 전시와 축제 등 현실의 물리적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점차 메타버스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실제 대 학들은 신입생 환영회를 메타버스에서 개최하고, 콘서 트와 뮤지컬 등 공연도 메타버스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찾으며 물리적인 공간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와 축제, 여행 등의 물리적 공간과의 작 별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장, 관광명소, 전시시설이 사 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은 교통과 식당, 숙박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도시, 국가 자체가 함께 영 향을 받는다.

메타버스의 공간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아져 실제 공간들의 중요도가 낮아진다면, 어쩌면 길 가의 벤치, 공원 등 우리가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 었던 공공의 공간마저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른다. 마트 와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건물과 함께 그 주변의 편의 시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와 같다.

또한 가상의 공간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것과 직접 흙 을 밟고 나무와 새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피부로 느끼 며 자연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며칠 전 얼굴의 삼분의 이를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단체로 공원에 산책을 나온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 을 보며 내가 누린 공간보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자라 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메타버스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맞지만, 현실의 공간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한 것 같다. 코로나 19가 지나간 후 남을 실제 공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의 변화, 실제 공간을 대체할 가상의 공간에 대한 이해 등 결국 우리 모두가 메타버스 시대를 맞을 준비를 제 대로 해야 한다.

기 고



김도연 광주시 북구 북동

최근 광주 북동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 원 도심의 중심 상업지역이면서 근대문화 공간을 품고 있 는 이곳에서 초고층(20~3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 기 위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구청에 존치 신청을 한 금남로 주변의 신한은행 광주지점, 고 용지원센터, 농협 광주지점 등 광주의 금융과 민생 업 무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고층 건물들마저 모두 허물고 전면 재개발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는 금남로에 위 치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심・부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금남로 주변 누문동・임동・유동과 같은 원 도심 상업지역이 별다른 고민 없이 민간 건축 자본으로 시공사와 투자자의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재개발 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일대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 쇠퇴한 구도심의

광주 도시 건축 선언과 북동 난개발

유일한 인구 유입 대안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변 인프 라와 미래의 인구 변화, 교통·경관, 일조권, 고층 아파 트로 인한 바람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나 구체적인 통계 자료 없이 오로지 사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재개발이 진행돼 왔다. 그러다 보니 정비구역 내 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마을 원주민 공동체는 해체 됐고, 원주민의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수익률에 초점을 맞췄다.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해 졌고, 사업은 오랜 시간 표류되면서 지금까지도도 아 무런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다.

590명 가량이었던 북동 주민 수는 60㎡의 공유 지분 으로 쪼개져 현재는 대략 13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 태다. 한 대지에 서로 모르는 등기상의 공유자가 토지 와 대지권 없는 주택 소유자와 서류상 함께 있는 것이 다. 빈집들이 늘어가면서 슬럼화는 가속화되고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릴지 모르는 확정 없는 긴 시간 동 안 남아 있는 원주민과 상업 종사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사업이 진행될수록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아닌, 투자를 위한 등기상 주민을 가장한 외지인이 다수의 목소리로 대변 된다.

북동은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역으로 문화・교육・역사가 어우려져 있는 지역이다. 아시아문화 전당과 충장로, 양림동, 동명동, 광천동 등을 보행과 대 중교통 수단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도심 관광 최적지 다. 현재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상업적 활용 가치를 바탕으로 광주 최초 성당인 북동 성당, 광주학생운동기 념탑, 금남로에 깃든 5·18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근대 문화역사의 거리, 김정호 거리와 같이 북동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

현재 도시재생특구로 지정돼 있는 광주역 주변과 아 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전남・일신방직을 연결하는 문화 역사 관광벨트 연결의 중심에 있는 북동을 무원칙 속에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 숲이 아닌 스토리텔링이 넘쳐나 는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는 없는가? 광주 원도심 역사의 관문인 금남로마저 아파트 숲으로 만들 것인 가? 더 이상 늦기 전에 도시 정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민해야 한다.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 도시 건축 선언'은 광주 답게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도시 공간, 다양성이 공존 하는 편안한 도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정한 도시 발전을 위해 행정과 주민 그리고 공공 건축가와 민간 사업자의 협업으로 이룰 수 있는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은 불가능한 것인가?

기후 위기의 시대, 2045년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을 선언한 광주답게 도시・건축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 하다. '북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깨고 소외된 구성원에 대한 포용, 안전·경 관·녹지·문화를 품은 '광주 도시 건축 선언'의 시민 참 여형 첫 롤 모델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無等鼓

호남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대선 경선 결 과를 보면 호남의 민심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듯하다.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 연 전 민주당 대표가 승리해 추격의 불씨 를 살리도록 하는 한편 전북 경선에선 이 재명 경기 지사가 과반 지지로 1위를 차 지하도록 함으로써 대세론을 다시 확인했 기 때문이다. 일단 호남 민심은 두 사람의 손을 모두 들어준 모양새다.

하지만 호남 전체로 보면 이 지사의 '판 정승'이다. 이 지사가 유효투표자 수 11만 2673표가운데 5만 6002

표(49.70%)를 차지한 데 반해 이 전 대표는 4만 9563표(43.99%)를 얻

는 데 그쳤다. 호남 민심은 지역 출신을 택 하기보다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영광 출신으 로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이 전 대 표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물론 이 지사 측 도 호남에서 과반 이상의 흔쾌한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은 본선을 감안하면 조금은 부담이 되긴 할 것이다.

앞으로 두 후보는 다시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다음 달 1일 제주를 시작으 로 부산・울산・경남(2일)에 이어 인천

(3일) 경선과 함께 펼쳐지는 2차 선거인 단 투표 결과가 민주당 경선의 승패를 사 실상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 지사 측은 호 남 경선을 통해 대세론의 날개를 확실히 펼쳤다고 보고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 반 지지를 확보, 본선 직행의 '매직 넘버' 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진영 에서는 이어지는 경선에서 선전하고 어떻 게 해서든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선투 표'의 가능성을 엿보려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후보가 되든 내년 3월 열

리는 '벚꽃 대선'에서 정 권을 재창출하기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은 아직 살아 있는 화산이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아파트값 고공 행진 등 변수와 악재가 쌓여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며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는 감동적 경선은 진보 진영의 정 권 재창출에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 전 대표에겐 추격의 동력을 부여해 경선 드라마를 이어 나갈 수 있게 한 호남 민심 의 전략적 선택이 돋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치 부 220-063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부 220-0621

체 육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则日報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